

[해설]  
 동부고시학원  
 사회 임혁 선생님

**[1번 정답] ④**

[해설] A는 조약, B는 국제관습법이다.

- ① A(조약)의 체결과 비준권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② ‘모든’ 조약이 아니다.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나 국내법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조약은 기본적으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③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휘한다. 즉,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며, 체결 당사국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약에 비하여 진정한 국제법 원으로 간주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국제관습법규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에서 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일관되게 표시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

**[2번 정답] ①**

[해설] A는 비례 대표제, B는 다수 대표제, C는 소수 대표제이다.

- ① 비례 대표제(A)는 다수 대표제(B)에 비해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다.
- ② 비례 대표제(A)는 원칙적으로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없다. 다수 대표제(B)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차이가 크다.
- ③ 다수 대표제(B)는 양당제를 촉진한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한 비례 대표제(A)와 소수 대표제(C)가 다당제를 촉진한다.
- ④ 최다 득표자 1인만이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B)가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3번 정답] ④**

[해설] 히틀러가 1933년 3월 24일 공포한 ‘국민 및 국가의 위기 극복에 관한 법률’ [히틀러의 수권법]에 관한 내용이다.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 수권법은 ‘독재로 통하는 다리’라고 불린다. 이

후 나치는 ‘창당금지법’ ‘제국문화부설립령’, ‘편집인법’ 등을 제정하여 일당 독재를 강화해 나갔다.

- ① 히틀러의 수권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 ② 히틀러의 수권법은 법을 수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 원래 초기의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는 군주의 절대권력 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이 목적이었으나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통치의 정당성을 문제 삼지 않았으므로 히틀러처럼 법을 이용한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법치주의(형식적 법치주의)를 보완하여 나온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 외에 통치의 정당성(법내용의 정당성)을 추가하여 법을 이용한 독재를 방지하고자 한다.
- ③ 사법권의 독립, 탄핵 심판 제도 등은 국가기관간 권력의 견제와 분립을 지향하므로 히틀러의 수권법과 관계없는 제도이다.

**[4번 정답] ②**

[해설] 특수 불법 행위를 묻는 문제이다. 갑은 사용자 책임, 을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 병은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정은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진다.

- ① 원칙적으로 고의 뿐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 ②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을은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진다.
- ③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아니고 병은 공작물 소유자로서 책임[무과실 책임], 정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중간 책임]을 진다.
- ④ 을과 정은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갑은 사용자 책임을 지므로 중간 책임, 병은 공작물 소유자로서 무과실 책임을 진다.

**[5번 정답] ④**

[해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사회국가의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첫 번째 지문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의 내용은 환경권에 해당하고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두 번째 지문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의 내용은 노동 3권에 해당하고 노동3권 역시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적극적 자유, 국가에 의한 자유에 해당한다.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사회국가의 원리에 해당한다.

- ①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 ② 사회적 기본권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문화 활동의 자유는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지문으로 봐야 한다.
- ④ 1919년 바이마르(Weimar)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단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환경권(제35조), 혼인 가족 모성 보전에 관한 권리(제36조)를 보장하고 있다

**[6번 정답] ③**

[해설] 헌법재판소를 묻는 문제이다.

- ① 사법부의 최고 기관은 대법원이다.
- ②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각급 법원이 가진다.
- ③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은 물론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 심판을 담당한다.
- ④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국회이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한다.

**[7번 정답] ③**

[해설]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법을 묻는 문제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몇몇 개별 법률들을 통하여 무과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는데, 가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항공기 사고에 관한 개정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가령 토지환경보전법 등의 환경오염 개별 법률, 원자력손해배상보장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 ㄱ. 틀렸다. 제조사가 당시 기술적 수준으로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ㄴ. 제조물 책임법 3조 ①항은 주관적인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특칙으로서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 책임요건으로 대체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는 제조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무과실 책임, 위험 책임]

ㄷ.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ㄹ. 틀렸다. 제조물 책임법 3조 ①항을 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제조물 책임은 당해 제조물 자체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8번 정답] ①**

[해설]

- ㄷ. 대통령의 긴급 재정부·경제 처분 및 명령은 국회의 사전동의 사항이 아니라 사후 승인 사항이다.
- ㄹ. 우리나라의 국무 회의는 심의기관이다

**[9번 정답] ②**

[해설]

- ①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지만 이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다.
- ②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 지급전까지 계약 해지는 매매 상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2배를 해지에 대한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 ④ 소유권 변동 사항은 등기부의 압구에 기재된다.

**[10번 정답] ①**

[해설]

- ① t+1대 의회에서는 갑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정당 간의 연립을 통해 내각을 구성해야 하므로 을당·병당·정당을 지지하는 다양한 국민의 이익(소수 이익)을 반영할 것이므로 의회에서 소수의 이익을 보호할 가능성이 높다.
- ② t대 의회에서는 갑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였으므로 연립 내각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
- ③ t대 의회에서 갑당이 과반수를 확보하였으므로 정국이 안정되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할 것이다.
- ④ t+1대 의회에서는 갑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으므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갑에서만 수상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11번 정답] ③**

[해설]

ㄱ. ㉠은 문화 절대주의, ㉡은 자문화 중심주의, ㉢은 문화 상대주의이다.

나. 맞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집단 내에 일체감을 높여주는 등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도 한다.  
 다. 중국의 중화사상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르. 맞다.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사례로는 일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식인 풍습, 아프리카의 할레, 중국이나 부여의 순장제 등 인류에 어긋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악습이 여기에 해당한다.

**[12번 정답] ①**

[해설] 사회 보장 제도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공공 부조, (나)는 사회복지 서비스, (다)는 사회보험이다.  
 ② 상호 부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다)사회보험이다.  
 ③ (다)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의 성격, (가)공공 부조는 사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④ (다)사회보험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즉, 대상자의 수혜 정도와 무관하다

**[13번 정답] ③**

[해설]  
 ① ㉠, ㉡ 모두 성취 지위이다.  
 ②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갑의 역할행동에 대한 결과이다.

**[14번 정답] ①**

[해설] A는 질문지법, B는 참여 관찰법, C는 면접법, D는 실험법이다.  
 ① 질문지법(A)은 참여 관찰법(B)에 비해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조사 대상자의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에 용이한 것은 면접법(C)이다.  
 ③ 연구 변수에 대한 인위적인 처치와 조작을 하는 것은 실험법(D)이다.  
 ④ 일반적인 법칙 발견에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은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인 질문지법(A), 실험법(D)이다.

**[15번 정답] ②**

[해설] ㉠, ㉡은 사회·문화 현상, ㉢, ㉣은 자연 현상이다.  
 나.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을 특징으로 한다.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를 갖는다.  
 르. 사회·문화 현상은 당위 법칙, 자연 현상은 존재 법칙이 적용된다.

**[16번 정답] ③**

[해설] 환율 변동의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금년도 환율(A점) 대비 내년도 환율(B점) 예측치를 나라별로 보면 원/엔 환율은 인하를 예측하고, 원/달러 환율은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환율 인상은 한국 제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인하되어 가격 경쟁력은 높아져서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인상되어 한국으로의 수입이 감소한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환율 인하는 한국 제품의 엔화 표시 가격이 인상되어 가격 경쟁력은 낮아져서 대일 수출이 감소하고, 일본 제품의 원화 표시 가격은 인하되어 한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한다.

**[17번 정답] ③**

[해설]  
 ① (가)는 가계에 해당한다. 생산 활동의 주체는 기업이다.  
 ② (나)는 기업이므로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③ 재화와 서비스는 실물 경제에 해당하고 실선의 흐름은 실물의 흐름이므로 맞다.  
 ④ 국방, 치안, 기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정부이다.

**[18번 정답] ②**

[해설]  
 가격 차별에서 시장 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차이에 따른 판매 수입의 변화를 묻고 있는 문제이다. 탄력적인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감소, 비탄력적인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은 증가, 단위탄력적인 제품의 경우 가격이 상승·하락과 상관 없이 판매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19번 정답] ④**

**[20번 정답] ④**

[해설]  
 (가)는 최저 가격제(가격 하한제), (나)는 최고 가격제(가격 상한제)이다.  
 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최저 가격제, 기획재정부는 (나)최고 가격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②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거래량은 (가), (나) 모두 Q1으로서 같다.  
 ③ 거래금액은 가격과 수량을 곱해야 한다. (가), (나) 모두 거래량은 Q1으로 같지만 (가)의 가격(P1)이 (나)의 가격(P2)보다 높으므로 가격 규제 이후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총 거래액은 (가)가 (나)보다 더 크다.  
 ④ (가), (나) 모두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